

“아니 벌써” 의심받는 ‘손학규 리더십’

한·EU FTA 어정쩡 태도에 지도력 훼손 “진보-중도 사이 눈치보기 행보” 비판도

4·27 재보선 승리의 기쁨에 취했던 것일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겉으로는 여야정 협상을 주도한 박지원 원내대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 손 대표의 정치적 상처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손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한·EU FTA 비준안과 관련한 ‘여야정 합의안(案)’을 파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이날 두 차례에 걸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FTA 피해대책 미흡과 야권의 정책연대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이 전날 밤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비준 지지 농성에 돌입한 것을 거론하며 “야당 정책협약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손 대표 주변에선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개진한다면 야권 내에서 그 책임을 손 대표가 다 뒤집어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연대의 대상인 다른 야당들이 비준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손 대표가 4·27 재보선 승리 후 줄곧 강조해온 야권통합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손 대표가 한·EU FTA 비준안 여야정 합의 과정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세부 대응을 일임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이날 격론이 벌어진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다수 의원들의 견해를 따르는 모양새를 취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가 진보와 중도 사이에서 ‘눈치보기’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결국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표로서 최대 현안에 대해 어정쩡한 행보보다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한·EU FTA 비준안 졸속 대응으로 추후 야권연대를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재보선 후 급반등하고 있는 손 대표의 지지율 상승 흐름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EU FTA 비준안 파동의 배경에는 민주당 주류-비주류의 역학구도도 미묘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동영, 정세균, 박주선,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여야정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재보선 이후 지도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손 대표를 견제하고 야권연대를 통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계산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주류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와는 차기 대권 경쟁에서, 여야정 협상을 이끈 박지원 원내대표와는 차기 당권 경쟁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4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EU FTA 합의처리 못해 아쉬워”

1년 임기 마친 한나라 김무성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5월로 1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해 5월4일 추대를 통해 여당의 원내대표로 취임한 김 의원은 전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끝으로 1년간 잡았던 원내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새 원내대표는 6일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정통 의회주의자’를 자임해 온 4선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환상의 호흡을 이루며 선거운 정치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탁월한 당 장악력과 협상력을 발휘, 당 소속 의원들을 통솔하는 한편 카운터파트너인 박지원 원내대표와 잦은 접촉을 가지며 ‘대화과 타협’의 여의도 정치를 일점 수준 북

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퇴임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여야간 합의의 속이 비준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전례가 없는 여야정 협의를 제1야당이 파기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한·EU FTA는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포함해 거칠 것은 다 거쳤고 야당의 어려운 요구도 합의 처리 약속을 받고 정부를 설득해 합의문까지 작성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거부해버리니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자고나 보니 민주당은 합의 처리 해줄 것처럼 속어 생색낼 수 있는 대책을 다 얻어내고 결국 마지막에 단독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이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그만 두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북한인권법과 불사출하지 않는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꼽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빅4 권력기관’ 정권따라 바뀐다

■ 전주대 오재록 교수 논문서 분석

MB정부, 기재·검찰·국방·국토부 참여정부, 재경·검찰·국방·교육부

정부 부처 내 ‘빅4 권력기관’이 정권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주대 오재록 교수(행정학과)의 ‘이명박 정부(2008년~2010년) 부처의 권력크기 실증연구’ 논문에서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1곳의 권력 지수를 측정해 결과 기획재정부(76.02), 검찰청(65.82), 국방부(65.23), 국토해양부(64.37)가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빅4 권력기관’으로 재경부·검찰·국방·교육부가 1~4위를 차지해 현 정부 들어 국토부의 권력은 세졌지만 교과부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5~10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

부가 차지했고 37~41위는 통계청, 병무청, 기상청, 국가인권위, 농촌진흥청 순이다. 행정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사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각각 11위와 12위에 머물렀다.

기재부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대통령과의 거리(회의·면담·접촉 횟수), 정책 자율성(전문가 조사), 재정적 자율성(특수활동비 등), 장·차관급 배출자, 언론의 관심도, 대통령실 파견, 국정감사 일수 등 대부분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다.

검찰청은 공소권, 수사권, 조사권 등 특별 권한이 커서, 국방부는 소속 인원이 많은데다 요직(최고위직) 보유비율이 높아서,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인 ‘4

대 강 사업’의 주권 부처여서 각각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수별로 보면 자원지수는 교과부, 자율성지수는 기재부, 네트워크지수는 교과부, 임여력지수는 검찰청, 잠재력지수는 검찰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오 교수는 기관별 자원 지수 등 5가지 지수를 계산한 뒤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권력지수를 측정했다. 5가지 지수는 자원지수(예산·인력 등 사결정 및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 자율성지수(예산·입법제량권), 네트워크지수(소속·산하기관·업무연계성 등), 임여력(장차관 진출, 요직 비율, 언론관심 등), 잠재력(공소권 등 주요 권한) 등이다.

오 교수는 “일반적으로 ‘빅4 권력기관’은 군·검찰·경찰·국정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용됐으나 실제로 권력지수를 측정해 보니 시대가 변하면서 주요 권력기관의 구성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낙연, 식품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가공식품에 함유된 카페인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자가 과자와 음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이 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커피나 콜라, 초콜릿, 녹차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에는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카페인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재 카페인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과다섭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정옥임, 성범죄자 취업규제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5일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개정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배숙, 학교상담법 제정 토론회

민주당 조배숙 국회의원은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담교사 등 전문지원자 확대 방안과 상담교사 배치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OECD 평균 학생 1000명당 담임·교과교사수는 76.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47명이고, 전문지원자 수는 OECD 평균이 5명인데 비해, 우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수업과 생활지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원지원도 부족하므로 전문상담교사를 늘릴 수 있도록 입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 류정영기자 ryu0418@kwangju.co.kr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인원 0명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근무조건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경운기 작동 가능자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영남리
급여 면접 후 결정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연락처 062)651-8871
010-3763-7335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액: 500만원~8,000만원
- ▶ 금리: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중인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액: 500만원~5,000만원
- ▶ 금리: 년 9%~
- ▶ 대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구중개업 등록기간: 대구광역시 대표자: 백영학
제1금융권이자율(최저년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년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년33%~44%(연체금리 44%))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고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필수!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엔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